

여야, 이재명 ‘일 못하면 끌어내려야’ 발언 공방

신동욱 “정상적인 분별력 상실해” 나경원 “탄핵공세 끝모르고 폭주” 박찬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론” 박성준 “정치 레토릭 수준 이하”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율가미가 조여오자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말은

정부·여당에 협치를 요구할 수 있는 야당 대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국정 운영의 파트너 역할을 포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 모르고 폭주 중”이라며 “11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위증교사 범죄 선고 시기가 다가오니 더 거세지는 야권의 탄핵 총공세”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다혜 씨가 전날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도 “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 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 운전”이라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

표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검은 야욕을 드러냈다”며 “한 달여 뒤 본인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을 두건의 1심 재판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탄핵 물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론’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한 동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련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말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며 “맥락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으

로 얘기한 것을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에 대해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러한) 마음이 딱 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당론을 모은다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가 많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한 대표의 발언은 본인의 생각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직격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보니 초보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당 대표의 정치 레토릭(수사법) 자

체가 너무 수준 이하다”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일을 못 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국민의힘 사무총장까지 전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 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10·16 재선거 선거인 영광 4만5248명·곡성 2만4640명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선거인 수가 6만9888명으로 확정됐다.

6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선거인명부 열람 등 절차를 마치고 재선거 선거인 수를 영광 4만5248명, 곡성 2만464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제납사항·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를 55곳(영광 41곳·곡성 14곳)에 설치하며,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거소투표신청자 290명(곡성 82명·영광 208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제공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55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각 세대에 전달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어 참고하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사전투표는 11~12일, 본투표는 16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정준호 “공공임대주택 절반 15년 이상 노후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은 6일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건축 시범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49%가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며, 이 중 25년 이상 경과한 주택도 약 20만 호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대부분 중단됐고, 현재 유일하게 추진중인 서

울 중계 1단지마저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저소득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재정 문제와 이주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취약계층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750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50대는 매년 보험료를

1%p 올리고,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씩 올리는 방안이다. 전 의원은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세대를 만들어낸다”며 개혁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비 참배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각) 마닐라 영웅묘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뉴스스

이재명, 내달 ‘2개 재판’ 1심 선고 ‘주목’

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11월 두 차례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

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징역유예 포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이 대표는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을, 수원지법에서는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국정조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6일 밝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서울=김선욱 기자